

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6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및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명시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장례비·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(제4조제1항에 제3호의2)
- 나.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대한 책임 명시(제9조의2)
- 다. 부칙 제2조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2. 5. 19. ~ 2022. 6. 8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

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「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, 재정 여건,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③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례비 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2. 치료비 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 등”이라 한다)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원인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서명		안전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안전정책과장 김 교 성
	팀장 직위·성명	안전기획팀장 박 상 규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효 진 (790-550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기준)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<u>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4조(지원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</u>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지원 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, 재정 여건, -----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-----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--- 정한다.</u> ③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<u>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장례비 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</u> 2. <u>치료비 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</u>

<신 설>

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

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
(이하 “생활안정지원 등”이라
한다)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
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

② ~ ⑥ (생 략)

<신 설>

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
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
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
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

①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
장례비·치료비 지원-----
----- 피해주민으-----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①

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
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
라 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
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에 따른
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
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원인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
청구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
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시
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지원, 간접지원, 피해수습지원, 장례비, 치료비, 그 밖에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하남시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되는 사항으로 일시적, 한시적인 경비이며 긴급 재난상황으로 비용 추계가 불가함

4. 작성자 : 안전도시국 안전정책과장(김교성)

관계법령 발췌서

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 재난안전법)

[시행 2022. 4. 5.] [법률 제18684호, 2022. 1. 4., 일부개정]
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(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제39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 8. 6., 2017. 1. 17.>

1. 자연재난

2.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·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·도 및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7. 1. 17., 2020. 8. 18.>

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
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
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
4. 자금의 융자, 보증, 상환기한의 연기,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지원

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
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
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7. 1. 17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. 17.>

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·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<신설 2017. 1. 17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[제목개정 2013. 8. 6.]

2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1. 9. 14.] [대통령령 제31979호, 2021. 9. 14., 일부개정]

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 <개정 2021. 1. 5., 2021. 9. 14.>

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재난피해자”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

가.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

1)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

2)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

1)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

2)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

3)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

라.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

마.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

바.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다음의 지원. 다만,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

1) 농경지 및 염전 복구

2) 농림시설·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

3)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(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4) 어선과 어망·어구의 복구

5)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

2. 간접지원: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

가.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 및 소금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

나.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

다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

라.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

마.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

3. 피해수습지원: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

가. 공공시설의 복구

나.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

다.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

라. 합동분향소 설치·운영 등의 추모사업

마. 파손된 주택의 철거

바.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정 평가 및 손해액 산정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”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“피해수습지원”이라 한다)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.